

“구강보건팀 해체 반대는 치과계 양심 살아있다는 것” 치협 등 범치과계 공동 기자회견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포기하는 보복성 구강보건팀 폐지 시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성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영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종배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 신이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등 범치과계 대표자들이 지난 3월 29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의 구강보건팀 해체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손정열 치협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가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설 확인 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보고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공동 성명서 발표 및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97년 설치된 구강보건팀은 짧은 기간 동안 복지부 전체 예산의 1/1000, 인력의 1/500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이제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성과가 없어 폐지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국민 구강보건 사업의 내실을 위해선 구강보건팀을 더욱 확대 개편하고 구강보건 전문기인 차대 예방교수 등을 구강보건팀 개방형 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 협회장은 또 이번 복지부 구강보건팀 해체설이 치협의 의료법 개정 반대에 대한 ‘보복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3월 1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 공청회 비로 직전까지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회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공청회 불참 직후인 18일 열린 한의협 총회부터 구강보건팀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다는 위기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이러한 범치과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강보건팀 폐지를 감행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 구강건강을 포기한 것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면서 “구강보건팀이 강화돼 국민 구강건강이 좋아지면 치과에서는 환자수가 줄어 치과운영면에서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해 치과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을 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를 포기하겠다는 건 치과계도 그동안 정부와 협조해서 해온 각종 구강보건 사업들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협회장은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범의료 비상대책회의에서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회 등이 치협과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구강보건팀 해체에 공동 투쟁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범치과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를 제안하며 정부가 이마져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투쟁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 하겠다”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김진범 대한구강보건학회 회장은 “구강보건팀이 설치된 이후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국민 구강보건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고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 오히려 충치수가 도시 보다 더 낮아지는 등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구강보건팀 존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사실상 치과의사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이 나빠져)치료를 많이 하면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등을 전담하는 부서인 구강보건팀을 지원하고 해체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치과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이철 건치 공동대표는 “치과계는 그동안 치과의사들의 이해를 위해 행동한 적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여러 구강보건 사업에 도움을 줬왔다. 구강보건팀을 치과계 도움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공동대표는 이어 “만약 구강보건팀을 사수하려는 것을 치과계의 이기주의로 몰아갈 경우 과연 치과의사들이 앞으로 저소득 노인 무료틀니사업, 영유아 및 학교 구강검진사업 등에 협조 할지 의문이다”며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면 그동안 민간에 맡겼던 공중구강보건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경숙 치위협 회장은 “치과계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 구강보건팀 폐지는 오히려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폐지에 앞장서고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폐지가 아니라 구강보건팀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6월 9일 ‘치아의 날’로 명칭 통일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4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 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일반의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검토하며 총회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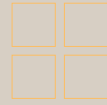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임시이사회에 이어 각 시·도지부에서 상정한 일반의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각 의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병행돼 사용하던 ‘구강보건의 날’과 ‘치아의 날’ 명칭과 관련해 이후 ‘치아의 날’로 명칭을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구강보건주간 포어로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인으로 정했다. 또 공격심사위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회대상(학술상)

에 고재승 서울치대 명예교수와 신인학술상에 이효정 분당서울대병원 측탁교수를 수상자로 추인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FDI 두바이 총회 대표단 구성과 관련 이를 국제위에 일임키로 했으며, 또 최근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키로 하고 조영식 기획이사를 비롯해 전민용 치무이사, 미경화 상근보험이사, 박덕영 강릉치대 교수, 김철신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연구원, 홍순구 기획실장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보고사항으로 북한 개성공업지구 협력구강병원 설립 추진경과를 포함해 치과의사전문외제도 시행에 관한 건, 각 시·도지부 협회비 납부현황, 신한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이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의 본격 참여 외국에도 없던 전례...치협·김춘진 의원 공조 성과

치과의사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수발행위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0명중 255명이 찬성(기권 5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험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즉 건강보험과 함께 또 하나의 공공보험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되며, 보험료 부과징수와 요양 신청기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국 15만18000명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되며, 2008년도에만 8천4백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한다. 보험 급여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50%)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30%) 및 본인부담 20%(재가입자는 10%)로 충당된다. 이번엔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안에 따르면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입자 ▲시설급

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 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중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됐다.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 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방문, 간호와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등급 판정위원회 참여위원으로 치과의사 참여가 사실상 보장됐다.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산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기요양 위원회는 위원장(복지부 차관) 1인을 포함, 22명 내외이며 근로자, 사용자,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지역자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와 함께 복지부 공무원 및 공단 이사장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 2008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시범사업실시 기준 8개 지역에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치협은 현재 앞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 중 구강위생관련 서비스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방문간호요원 교육을 준비중이다.

상근회장제·의료법 투쟁기금 모금 등 통과 치협 제56차 제주도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치기 치협 집행부부터는 협회장이 치협에 매일 나와 상시 근무하는 협회장 상근제도가 도입된다. 또 치협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이 인정돼 추진되며,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등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키 위한 투쟁기금(특별기금)이 모금된다.

치협은 지난 4월 21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7년도 치협 일반회계 예산 49억9천4백여만원과 치의신보 특별회계예산 45억4천4백여만원을 승인하는 한편, 치협과 각 지부에서 올린 정관 개정안, 일반의안 등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이번 총회 핫 이슈로 떠오른 ▲협회장 상근제 도입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4월 5차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치협에 상주하는 첫 상근 회장이 탄생되고 치협의 정책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현행 6명인 치협 부회장을 2명 늘려 8년까지 증원할 수 있게 하는 부회장 증원안과 치협 내 '경영정책위원회' 신설 정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행 대의원수 201명을 22명으로 20명 늘리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돼 대의원수 증원은 없게 됐다.

특히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키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키로 의결하고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치과의사 심화교육수련제도(Advanced General Dentistry·이하 AGD) 추진을 승인하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소수 정예로 추진하되 치협이 유연성을 갖고 전문의 정원을 조정토록 의결했다. 그러나 치협이 일반 의안으로 상정한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개최 건은 1표 차이로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지지 획득에 실패, 부결됐다.

이번 56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는 파행 총회로 비난받았던 55차 대의원 총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심기 일전, 치과계 주요 현안을 처리함으로써 역대 어느 총회보다 알찬 수확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구강보건팀 해체를 반드시 막겠다"며 회원들은 치협을 믿고 대응 단결 할 것을 촉구했다.

박중수 대의원총회 의장도 "의료법 문제 등 치협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인철·지현택·윤홍렬·김정규 치협 고문, 김경선 대한여치과외과협회 회장, 김영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이경재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이 참석, 56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축하했다.